

전국 고속도로 천연기념물 '수달' 교통사고, 전남이 최다

2016년 이후 천연기념물 로드킬 29건, 11건이 전남 발생

생태 통로 등 설치도 저조... "사고 최소화 대책 시급"

최근 6년간 전남 지역 내 고속도로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이 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6년 1월~2021년 8월) 전남 지역 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치명 사고

고(로드킬)는 369건이었다. 이 중 수달 등 천연기념물 로드킬 사고가 11건 발생, 지난 6년간 전국 17개 시·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9건(수달 28건·산양 1건) 중 37.93%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구례군·순천~완주 고속도로(완주 방향) ▲순천시·호남고속도로(천안 방향) ▲함평군·무안~광주고속도로(광주 방향) ▲무안군·서해

안고속도로(서울 방향) ▲함평군·무안~광주고속도로(무안 방향) ▲보성군·영암~순천 고속도로(영암 방향) ▲함평군·무안~광주고속도로(광주 방향) ▲보성군·영암~순천 고속도로(순천 방향) ▲무안군·서해안고속도로(서울 방향) ▲함평군·무안~광주고속도로(광주 방향) ▲장성군·고창~담양고속도로(담양 방향) 등이었다. 치명 동물은 모두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이었다. 이어 지역별 고속도로 내 천연기념물 로드킬은 전북 6건, 충남 5건, 경남·경북 각 2건, 강원·충북·대전 각 1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 고속도로에선 같은 기간 23건의 로드킬이 발생했으나,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이 치명 사고는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내 로드킬은 총 9373건이었다. 지역 별로는 충남이 20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1562건, 경기 1476건, 강원 1346건, 경북 839건, 전북 755건, 경남 493건, 전남 369건, 대전 284

건 순이었다. 동물 별로는 고라니가 8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563건, 너구리 365건, 오소리 125건, 멧토끼 36건, 삿 35건, 노루 34건, 족제비 22건, 사슴 4건, 기타 46건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로드킬 조사·관리 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다발 구간을 정하고, 유도 울타리·생태통로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별 고속도로 생태 통로는 ▲강원 14개 ▲경북 10개 ▲전북 8개 ▲경남 5개 ▲전남·충북 각 4개 ▲경기·충남·울산 각 3개 ▲광주 1개 등 총 55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로드킬

이 잦은 충청·호남 지역 고속도로엔 생태 통로 설치가 저조하다. 조오섭 의원은 "야생동물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2배나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4대강의 보를 완전 개방하면서 멸종 위기 동물이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고속도로 사고로 죽는 천연기념물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발구간 현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유도 울타리, 생태 통로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세계동물의 날 '동물은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동물의날인 4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누워 동물권리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빙판길 과속에 광광' 17명 사상 버스기사, 집유→실형

징역 8개월 선고

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연쇄 충돌사고를 내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시외버

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단속 장비 운영률, 광주 52.8%

지난해 3월 이후 광주·전남 단속 장비 급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지역 내 단속 장비는 늘었지만 상당수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광주 지역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는 123대다. 이 중 실제 운용 중인 장비는 52.8%

인 65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스쿨존에도 단속 장비 389대가 새롭게 설치됐으나, 139대만이 운영됐다. 비율로 따지면 35.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스쿨존 내 신규 설치 과속 단속 장비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였으나, 경찰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2165대(54%) 뿐이었다.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장비는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

산을 수립하고 설치 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 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를 마친 단속 장비를 운영 주체인 경찰로 이관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 장비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경찰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단속 장비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선욱기자

지하철 방화 복역 뒤 또 상가 불 낸 70대, 2심도 실형

출소한 지 1년여 만

7년 전 서울 지하철 전동차 방화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광주의 상가에 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 고법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했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 지하 1층~지상 2층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지상 계단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초기 진화됐

다. A씨는 해당 건물주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건물 지하층에 무도장을 개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차 권리를 주장해왔다. 범행 당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차장이 강제집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보복을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